



긴급고용안정지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스

# “與 전국민 4차 지원금 재보선 앞둔 표포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나온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이 표(票)포리즘 논란에 휘말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낸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한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국민에 4차지원금 지급할 수도 코로나 확산세 잦아들때 지급시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재보선 앞두고 보편지급 발언 매표행위·악성 표포리즘” 비판

당 지도부도 이 대표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라디오방송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지원금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규모 확대까지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바닥이 찍혀 갈라졌는데 물을 조금 넣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물이 잠길 정도로 충분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시기와 방법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표 계산을 위한 정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매표행위’, ‘악성 표포리즘’이라는 비판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져 재정에 위기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결산(699조원)과 비교할 때 127조2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7년 36%로 출발해 2018년(35.9%) 다소 줄어든 이후 2019년 37.7%를 기록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재원 조달에 적자 국제 발행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다양하다. 먼저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 제한이 생긴다.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필요한 재정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물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기준 37.7%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2001년 17.2% 이후 해가 갈수록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관리 필요성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경우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이다.

한편, 여당에서 밝힌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 투입 규모 대비 효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된 예산 대비 26.2~36.1% 수준이다. 이에 국가채무 증가 우려를 고려해, 추가 재정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줄고 OLED 역대최대

# 디스플레이 수출구조 고부가가치 중심 전환

산업부, 작년 OLED 수출 109억 달러 수출비중 60% 세계점유율 1위 유지 올 2.4% 증가한 184억 달러 기대

지난해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다.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출구조 전환으로 올해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플러스 전환이 기대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스플레이 수출은 1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2.2% 감소했으나, OLED 수출은 109억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8년 247억달러, 2019년 205억달러에 이어 3년 연속 감소를 기록 중이다. 반면 OLED 수출은 3년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했다. OLED 수출 비중도 전체 수출의 60%를 넘어서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

율은 한국이 37.3%, 중국 36.3%, 대만 21.4%, 일본 4.3% 순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폴더블폰,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LCD(액정표시장치)에서 OLED로의 사업전환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산업부와 디스플레이협회는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184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LCD에서 OLED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2019년 OLED 수출이 LCD를 첫 추월해 골든크로스를 달성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격차를 더 벌려 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올해 폴더블폰에 이어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할 초고화질 OLED TV 출시로 OLED 수출은 전년대비 19.6% 증가한 130억달러, 수출비중도 전체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풀러블TV, Q

D디스플레이 등 초고화질 OLED TV와 신규 OLED 혁신제품이 대형 OLED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OLED 역시 5G 보급 활성화, 폴더블폰 등 고급화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스마트폰의 OLED 채택기종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 OLED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도 밝다. 시장조사기관 OMDI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비대면 IT 제품 확대와 프리미엄 OLED 시장 확대로 전년대비 13.8% 증가한 1398억달러로 전망된다.

OLED 시장은 모바일·TV 시장에서의 OLED 수요확대와 폴더블폰, 풀러블TV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28.4%)하고, LCD 시장은 모바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TV용 LCD 가격 상승과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9.3%)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李·朴 특별사면, 국민 눈높이 맞춰 결정하는 것”

최재성 靑 정무수석비서관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가 재차 확대 해석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쪽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앉아 있다. /뉴스스

직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실 것”이라며 “사면은 보통 대통령의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런 문제는 미리 (참모들과)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협치 차원에서 이낙연 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제안한 새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기도 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외면함에 따라 연이은 지지율 하락 등을 고려해 협치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직후, 그 뒤로 문을 열어놓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영수회담 형태와 관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 차원의 대화’ 혹은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식을 두고 고려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오래전에 제안하고 타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빠를수록 좋고, 국민의힘 의사에 따라 바로 이뤄질 수 있고, 김 비대위원장이 말한 의제와 내용 등이 사전에 조금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만 보이면 진행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 낙지서 항이뇨 후보물질 발견... 신약 개발 추진

해수부, 연구결과 특허 등록

해양수산부는 낙지에서 소변량 감소(항이뇨) 효과가 있는 신경 조절물질을 발견하고, 향후 배뇨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1월 초에 연구결과를 특허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체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중 헬스케어 소재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낙지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세파로토

신’을 발굴했고,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하다 이번 항이뇨 효과도 발견하게 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낙지의 세파로토신이 항이뇨 작용과 연관된 물질을 활성화해 수분이 몸 속으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소변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실험용 집쥐에 세파로토신을 투여한 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했을 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소변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삼투 농도는 높아져 노폐물의 체외배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지난 7일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효능 검증을 거쳐 기술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이전이 이뤄지면 임상시험 등을 거쳐 야뇨증 등과 같은 소변 과다 배뇨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바이오 신약이나 건강 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60대의 70% 이상은 야간뇨로 인한 수면 방해를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